

전남도의의회 “오류·누락·왜곡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호남 3개 시도 24억 투입 편찬 고대사·전남 근현대사 허점투성 “지역 정체성·공공성·신뢰 상실” 신민호 도의원 발의 결의안 촉구

전남도의의회가 고대사 왜곡과 근현대사 오류·누락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천년사’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22일 전남도의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

주당·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및 배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도·광주시·전북도가 각각 8억원씩, 총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찬한 관한 사서다.

그러나 지난해 출간 이후 고대사 서술 논란 등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배포가 중단됐다.

전체 출판 부수는 1,200질, 각 34권으로 총 4만 800권 규모이며, 현재까지 배포된 물량은 집필진 배포용 213질로 확인됐다.

배포가 중단된 전라도천년사는 전남



전라도천년사는 편찬 초기부터 입나 일본부설 등 고대사 일부 내용이 식민사관을 반영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반발로 봉정식이 취소됐고, 이후에도 전남 근현대사 서술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근대 4권인 독립운동사에서 전남지역 독립운동 서술이 대거 누락된 사

도·광주시·전북도 등 3곳에 나눠 각 329질 1만 1,186권씩 보관 중이며 전남은 무안 도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상당 부분 빠져 있고, 미주지역 독립운동 서술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균형성과 대표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남도가 전문가들로 자체 검증팀을 구성해 재감수한 결과, 수백권에 이르는 오·탈자와 기초적 사실 오류가 확인됐고, 특정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에서도 균형성과 역사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5·18민중항쟁과 여순사건 관

련 서술, 진일 문인 기술방식 등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감수 결과는 ‘오류·누락·왜곡’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만큼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분적 수정·보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편찬은 단순한 출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공적 사업”이라며 “공적 예산이 투입된 관한 사서가 공공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전남도가 광주시·전북도와 협의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와 함께 △편찬 및 감수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관련 자료의 전남도의의회 공개 △향후 재편찬 시 지역 균형과 올바른 사관, 지역 정체성이 드러난 독립운동사 및 민주화운동 서술의 충실성을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현장 밀착형 활동”...전남도, ‘앵커기업’ 유치 총력

특별전담반 핀셋 전략 강화 통합특별시 산업 기반 확대

전남도가 통합특별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주요 산업별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4차 회의를 열고 앵커기업 중심 투자유치 추진상황과 실질 투자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25일 첫 회의 이후 지속 추진중인 기업유치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김영록 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투자유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그동안 추진한 기업 접촉

현황과 유치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 생태계에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 제안 전략과 단계별 후속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단순 접촉에 그치지 않고 투자 의사결정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별 수요에 기반한 ‘핀셋형 유치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출범 이후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고, 최근에는 실국장 중심의 기업 방문, 현장 상담, 맞춤형 제안 활동을 확대하는 등 현장 밀착형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기업과 지속적 접촉을 통해 투자협약과 생산시설 증설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제 기업의 관심을 실제 투

자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약 70일을 앞둔 지금이 투자유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전남이 가진 산업입지, 재생에너지, 전력·용수 등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앵커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제조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정근산 기자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이정현 단수공천

국민의힘은 22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는 풍부한 국정경험과 폭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



말했다.

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다”고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등록했던 안태욱 전 광주시장위원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광주 광산구를 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안태욱 전 위원장) 당의 새로운 도약과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CU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CU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BGF리테일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변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직

접교섭을 거부한 채 노동자를 버랑 끌고 나간 원청 기업 BGF리테일과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고용받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만든 제도”라며 “CU 원청인 BGF는 노조를 탄압하고 손해배

상을 청구하며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측의 억지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철회,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에 노동자를 신설하고 산하에 ‘노란봉투법 지원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권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 “행정통합 출발부터 배신”

준비예산 57억 삭감 성토 “보수 정치인들 조롱거리”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예산 573억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출발부터 배신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전남 시민들이 줄속 추진 우려에도 힘을 모았던 이유는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

라야 한다’는 말을 믿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믿음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대전에서 행정통합 예산 삭감 상황을 두고 ‘대전도 큰일 날 뻔’이라는 현수막이 대전역 앞에 걸려있는 모습을 언급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민주당 약속을 믿은 시민들은 지금 보수정치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자치분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소멸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순진하고 우스꽝스러

운 것이냐는 비아냥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 준비 예산(마중물 예산) 지원은 행정통합 추진 시 얻게 될 인센티브의 하나로 약속된 것이었다”며 “이 예산은 행정통합 초기에 발생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후 행정통합 로드맵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예산조차 저리의 빚(지방채)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승현 기자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제26회 5·18 마라톤대회

달려라, 오월의길을! 기억하라, 민주와 평화를!!

일시 2026년 5월 2일 (토) 집결 08:00 출발 08:30

장소 국립5·18민주묘지광장

주최 5·1871재단 전남매일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은행 플러스플러스